

안갯속 출구(EXIT) 찾기! : 부동산 PF 여건 및 시장 점검

< Executive Summary >

■ 부동산 PF 시장이 직면한 과제는 부실사업장 정리와 신규 영업 확대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중금리 급등, 건설사 유동성 악화, 부동산 매입수요 감소 등이 중첩되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며 부실 사업장 정리가 과제로 대두
- 신규 영업을 통해 PF 참여기업의 재무여력을 개선하고 최근 확대되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

■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완료까지는 시간 필요

- 금융당국 주도로 PF 사업장을 평가 및 분류하였으며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총당금 규제 강화, 경공매 촉진, PF 정상화펀드 조성 등을 진행
- 매도자-매수자간 호가 차이가 지속되며 부실 사업장의 거래는 미흡한 상황으로 특히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지방 비주택 사업장은 정상화까지 난항

■ 재무여력 축소, 자금부담 증대로 신규 영업은 여전히 위축

- (①시행사: 신규 투자 부진) 기존 추진 사업의 비용 증가 및 자금 투입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부실 대응을 위한 시행사의 유동성이 악화되며 신규 사업이 축소
 -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 PF 제도개선으로 자금 투입 부담도 커지면서 일부 대형사 외에는 사업참여 재 확대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
- (②건설사: 신규 수주 둔화) 원가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 미분양 증가로 인한 자금 부담으로 영업 현금흐름이 급감하며 재무여력이 위축되고 신규 수주도 둔화
 - 대형 건설사 및 그룹 계열 건설사 등은 자체 또는 모기업의 자금력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부의 신용보강 없이도 시공 참여가 가능하나 중소형 건설사는 부동산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신탁이 크게 위축되면서 시공 참여 기회가 감소
- (③금융기관: PF 취급 부담 증가) '부실 우려' 사업장, 高 레버리지 사업장 등에 대한 자본 규제 강화로 사업성 및 자본구조가 취약한 사업장은 취급 부담 증가
 - 업권별 PF 취급한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 등도 도입 검토
-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핵심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은 수요가 양호하고 부실 우려가 적어 금융사의 PF 취급이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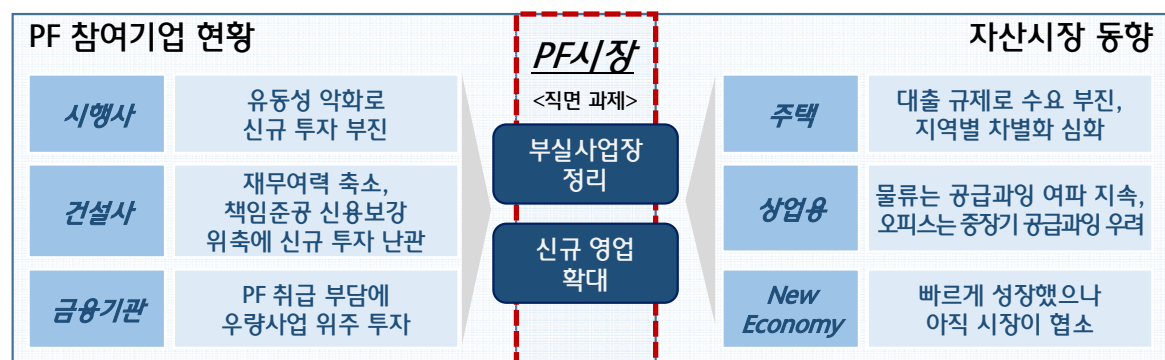
■ 부동산 자산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해 신규 영업 확대에 걸림돌

- **(주택)**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대출 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지속으로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시장 침체 지속
- **(상업용: 물류창고)** 2022~2024년 공급 과잉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PF 또한 공실 및 미매각 위험이 커져 자금 조달이 경색
- **(상업용: 오피스)** 임대료 상승에도 공급 부족으로 낮은 공실률을 유지 중이나 2029년 이후 공급 증가 우려로 신규 투자 및 PF 자금조달이 둔화될 우려
- **(New Economy: 데이터센터)** 수도권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나 전력 확보, 민원, 운영사 확보 등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
- **(New Economy: 시니어시설)** 투자대상으로 부상했으나 원가 부담이 큰 반면 고령자의 입소비 지불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프리미엄 시설로 PF 시장이 한정

■ PF 시장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

- PF 시장 부진은 부실 사업장 증가로 인한 각 참여업체의 재무적 부담 확대와 자산시장의 침체가 중첩되며 나타난 결과로 단기간 내 시장 회복은 어려울 전망
- 高 레버리지로 인한 개발사, 건설사, 금융사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PF 시장이 부실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

그림 | 부동산 시장 내 주요 영향요인과 이슈



수석연구원 하 서 진 seojinha@hanafn.com

Key Words : 부동산 PF, 부실 정리, 신규 영업

I. 부동산 PF 시장의 두 가지 과제: 부실 정리, 신규 영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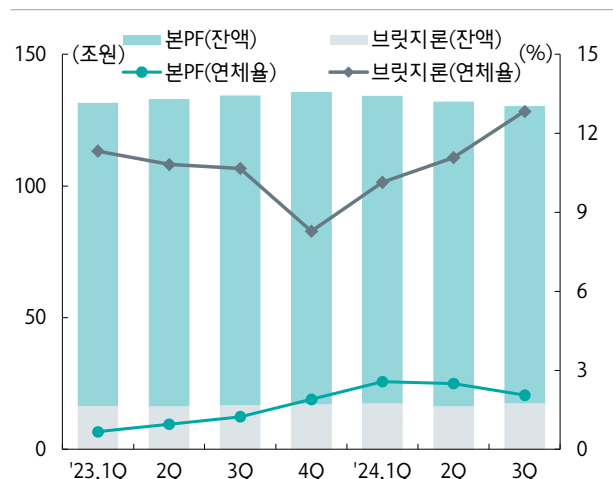
- 부동산 PF가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며 부실 사업장의 정리 필요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중금리 급등, 건설사 유동성 악화, 부동산 매입수요 감소 등이 중첩되며 부동산 PF의 부실 우려가 확산
 - 정부는 채안펀드, 회사채 매입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부실 확산을 방지
 - 본PF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사업성 저하, PF 금융시장 위축 등으로 브릿지론 연체율이 급등하며 부실 우려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
 -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어야 PF 참여기업별로 신규 사업장 투자가 확대될 수 있어 부실 정리는 PF 시장 정상화의 선결 과제
- 신규 영업 확대로 PF 참여기업의 수익성 회복 및 공급부족 우려의 해소 가능
 - PF 참여기업(시행사, 건설사, 금융사)의 재무여력 개선을 위해 신규 영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회복이 필요
 - 다만, 사업성 악화 우려, 참여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PF 취급 리스크는 증대
 - PF 리스크를 관리하며 신규 영업을 통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별로 신규 사업장의 효과적인 선택 및 집중이 필요
 - 또한 신규 PF 영업 확대로 주택 등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며 최근 제기되는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표1 | PF 시장안정 프로그램

시점	내용	규모
2022.10월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시장 안정 P-CBO, PF 사업자 보증 등	55.4조원
2023.3월	PF 정상화펀드, 산·기온 건설사 지원 확대,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등	10.7조원
2023.9월	PF지원(보증·펀드) 확대, 건설사 P-CBO, 비아파트 지원 등	18.4조원
2024.3월	PF 사업자보증 추가 확대, 비주택 사업자보증 신설	9조원

자료 : 금융위원회('24.05.14.)

그림1 | 부동산 PF 대출 잔액 및 연체율



자료 : 금융위원회('24.12.19.)

II. 부동산 PF 과제별 현황

1. (부실 정리) 등급 평가 등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정리 완료까지는 시간 필요

■ 정책 지원 등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기반은 확보

- 금융당국 주도로 PF 사업장을 평가 및 분류하였으며¹⁾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규제 강화, 경공매 촉진 등을 진행
 - 사업장 평가 결과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곳은 금융기관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경매 또는 상각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유도
-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해 사업장 매입, 재구조화 등 사업장별 지원을 추진, 특히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비 아파트, 지방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
 - 캠프펀드(1.1조원) 외 은행·지주(0.6조원), 증권업(0.6조원) 등 민간 자체 펀드도 조성

■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이견으로 부실 사업장의 거래 규모는 미흡

- PF 정상화 펀드의 매입 실적은 펀드 규모 대비 적은 수준으로, '24.5월 기준 PF 정상화펀드 조성규모 2.2조원 중 약 3,200억원을 사업장 재구조화에 투입
- 부실 사업장 사업 재개를 위해 할인 매입 및 추가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나 매도자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 매도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위축으로 매수자 물색도 난관
 - 특히, 장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지방 비주택 사업장은 정상화에 난항

표2 | 부동산 PF 유형별 사업성 평가 결과('24.9월, 조원)

구분	전체	유의 (비중)	부실우려 (비중)
합계	210.4	8.2 (3.9%)	14.7 (7.0%)
본PF	150.8	2.0 (1.0%)	2.6 (1.2%)
브릿지론	23.1	1.9 (0.9%)	2.8 (1.3%)
토담대	36.5	4.2 (2.0%)	9.3 (4.4%)

자료 : 금융감독원('24.12.19.)

표3 | 부동산 PF 관련 자금지원 현황

프로그램명	목표·조성규모	집행실적
PF 사업자 보증	35조원	29.5조원
신디케이트론	1조원(최대 5조원)	0.36조원
캠프펀드	1.1조원	0.37조원
은행지주펀드	0.6조원	0.26조원
새마을금고-유암코	0.5조원	-
증권업계 펀드	0.6조원(최대 3.3조원)	0.3조원
IBK-유암코	0.25조원	-
우리금융지주	0.1조원	-

자료 : 금융감독원('24.12.19.)

1) 금융감독원은 부실 사업장(연체, 연체 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24.6월) 모든 사업장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해 2차 평가를 실시('24.9월)

2. (신규 투자① 시행사) 유동성 악화 및 규제 강화로 신규 투자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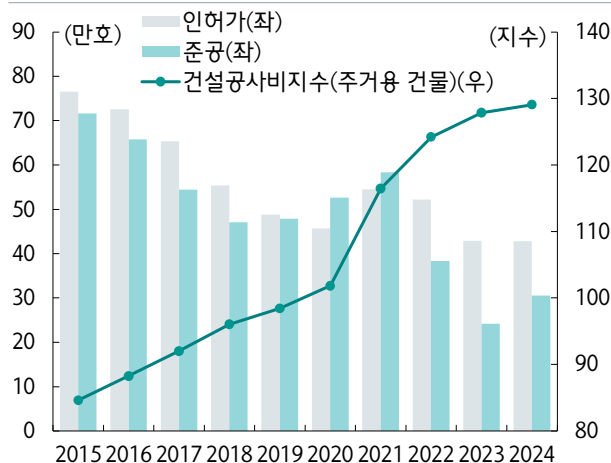
■ 시행사는 부실 사업장 대응 등을 위해 유동성 확보에 주력

- 기존 추진 사업의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으로 추가자금 투입 부담이 커진 한편, 분양 저조로 투자자금 회수도 지연되며 시행사의 유동성이 악화
- 부실 사업장 대응을 위한 신규 사업 축소,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유 사업장 매각 등으로 시행사의 사업 추진 물량이 감소
- 또한 2020년 대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하고 토지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투입 자금도 증가
 -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비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코로나 시점인 2020년 대비 약 30% 상승했으며 공사기간 증가, 임금 상승 등 공사비 상승요인 지속

■ 규제 강화로 사업장별 자금 마련 부담도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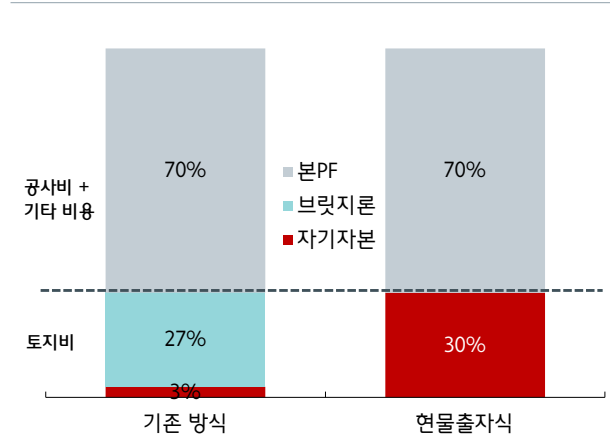
- 금융당국은 개발사업의 높은 차입 비중으로 PF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하도록 PF제도 개선을 추진
 -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충당금 규제 및 위험가중치 차등화도 고려
 - 시행사는 총 사업비 대비 평균 3%의 자기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기에 개선된 제도를 적용 시 사업장별 자금마련 부담이 확대
- 일부 대형 시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행사는 대규모 자금투입이 쉽지 않아 PF 제도개선 이후 시행사의 사업 참여가 다시 확대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

그림2 | 주택 인허가, 준공, 건설공사비지수



자료 : 국토교통부

그림3 | 현물출자를 통한 자기자본비율 상향



자료 : 금융위원회('24.11.14.)

3. (신규 투자② 건설사) 재무여력 축소, 채준 신용보강 위축으로 신규 수주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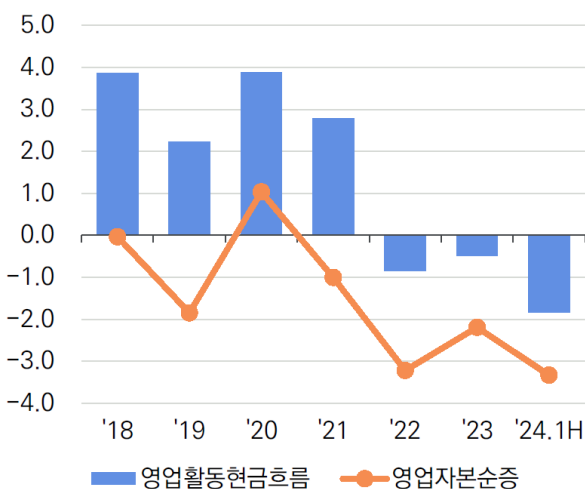
■ 원가 상승, 미분양에 따른 자금 투입 등으로 건설사 재무여력 축소

- 공사 원가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 미분양 증가로 인한 자금투입 부담 등으로 건설사의 영업 현금흐름이 급감하며 재무여력이 위축되고 신규 수주도 둔화
 - 공사비 상승세가 가팔랐던 2021년 이후 건설사 영업현금흐름은 감소세로 전환
 - 건설 수주액(조원) : 212('21)→230('22)→190('23)→170('24, 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 한편, 중소 및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부도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시공사 신규 수주를 위축시키는 요인
 -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등 법정관리 신청

■ 책임준공 관련 민간 신용보강 기능 약화로 중소형 건설사의 시공 참여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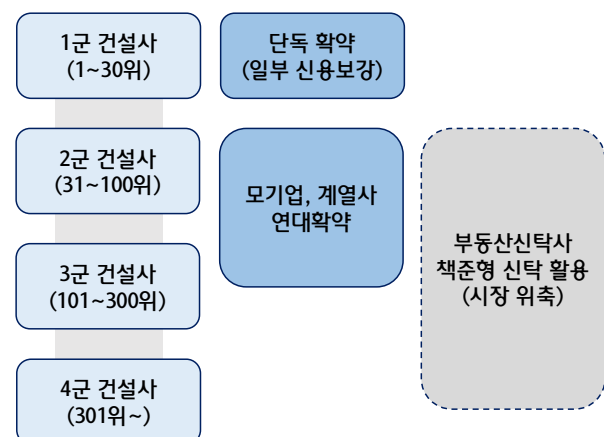
- 공사비 증가 및 시공사의 재무여력 악화로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며 시공사 책임준공 역량에 대한 시장 신뢰가 약화
 - 단, 대형 건설사와 그룹사 계열 건설사 등은 자체 또는 모기업의 자금력과 신용도를 바탕으로 채준 등 외부의 신용보강 없이도 시공 참여 지속
- 중소형 건설사는 그동안 신용을 보강해 왔던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신탁이 크게 위축되면서 시공 참여 기회가 감소

그림4 | 주요 건설사 합산 영업현금흐름(조원)



주 : 한신평 등급 보유한 건설사 13개사 합산
자료 : 한국신용평가

그림5 | 도급순위별 신용보강 형태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4. (신규 투자③ 금융사) PF 취급 부담이 커지면서 우량사업에 집중

- PF 취급에 따른 자본 부담이 확대되며 금융기관의 PF 신규 취급이 위축
 - PF 사업장 분류를 통해 ‘부실 우려’ 등급으로 구분된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대출금액의 75%만큼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제가 강화
 - 업권별 PF 취급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 PF 위험가중치를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는 규제도 정부에서 검토 중
 - 이에 따라, 부실 우려 가능성이 높은 사업일수록 PF 취급 부담이 높아져 금융사 영업 부담이 확대
- 수도권 내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PF 쏠림 현상이 심화
 - PF 시장의 위축에도 사업성이 양호한 수도권 핵심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은 부실 우려가 적어 금융사의 PF 취급이 원활
 - 공동주택, 프라임급 오피스 개발사업 등은 수요 기반이 양호해 부실 가능성 낮은 편
 - 우량 시행사 및 시공사가 참여하는 개발 사업은 대형 금융사가 대규모 여신을 전략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증가
 - 한남3구역, 서울 북부역세권, 서소문 11/12지구 등 대규모 금융 취급사례 증가
 - 금융기관의 신규 PF가 수도권 대규모 사업장으로 집중되는 반면 지방 사업장의 PF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는 등 PF 금융시장에서도 양극화 심화

표4 | 업권별 PF 규제

업권	구분	한도
증권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
캐피탈	PF 대출 및 채무보증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저축은행	PF 대출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
	PF 대출+건설업+부동산업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내
상호금융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 등 총액의 50% 이내 (각각 30% 이내)

자료 : 금융위원회

표5 |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동산금융 취급 사례

구분	내용
KB	서울 북부역세권 브릿지론 대출 한남3구역 정비사업 대출
신한	광주 광천동 정비사업 주선/총액인수 한남3구역 정비사업 주선/대출 밀레니엄힐튼 PF
우리	한남3구역 정비사업 대출
메리츠	유엔사부지 브릿지론 취급 롯데건설 대출협약 체결
하나	대전 도안2-2지구 본PF 한남3구역 정비사업대출 서소문 11/12지구 오피스 개발사업 주선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Ⅲ. 부동산 자산시장은 여전히 불안정

1. (주택) 가계부채 관리와 수요 쏠림으로 지역별 차별화가 더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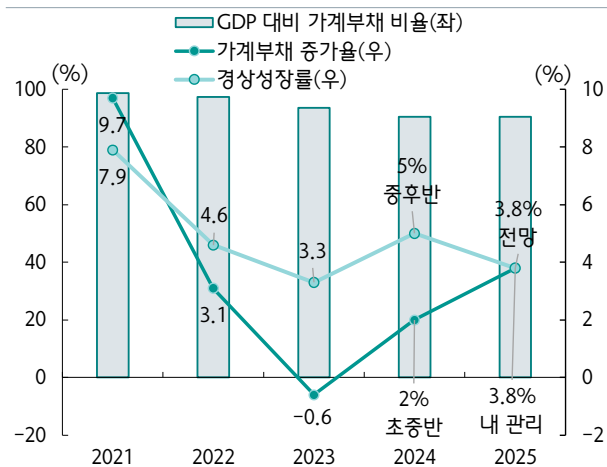
■ 가계부채 부담, 매수심리 침체로 매수세가 부진하고 시장 불확실성도 확대

-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대출 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지속
 - 정부는 '25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인 3.8%로 관리('24년 5% 중후반)
- 정치적 불확실, 내수 부진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침체되며 주택 매매거래량은 장기평균(월 7.6만호)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 주택 매수심리지수 : 114.6('24.6월) → 116(9월) → 100.8(12월) → 103('25.1월)
 - ※ 0~200 사이의 값으로, 95 미만은 하강, 95~115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국면

■ 지역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지방 주택 개발사업의 분양 리스크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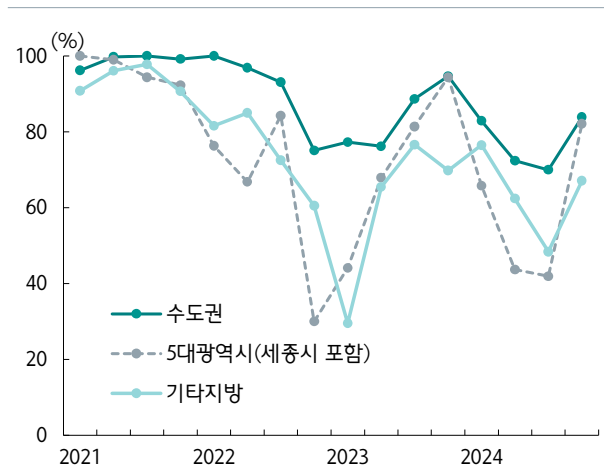
- 대출 규제 강화, 세금 부담 등으로 가격 상승기대가 형성되는 일부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수도권과 지방, 지방 도시 간 시황이 차별화
-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 및 할인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방요인인 매물적체가 지방에서 장기화될 우려도 증대
- 분양 시장에서도 수요 위축세가 뚜렷한 지방에서 분양률이 저하되는 등 미분양 우려가 확대되며 주택 PF 또한 분양 리스크가 적은 수도권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

그림 6 | 가계부채 증가 관리 계획



자료 : 금융위원회('25.02.27.)

그림 7 | 민간아파트 초기분양률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상업용 부동산) 공급 과잉 해소가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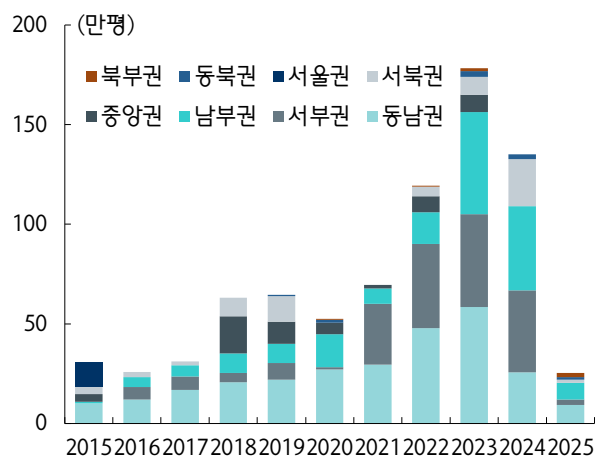
■ 물류센터는 공급 과잉 여파와 수요 둔화로 공실 리스크가 지속

- 신규 착공 감소에도 2022~2024년 공급 급증의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차 수요도 둔화되면서 공실 리스크가 지속
 - 상온 공실률(% , '24.2H) : 동남권 15, 서북권 32, 남부권 12, 서부권 23, 중앙권 5
- 물류센터 신규 PF 또한 공실 및 미매각 위험이 커져 자금 조달이 경색되며 급감
 - 착공 전 임차인을 미리 확보하거나 대형 개발사, 펀드가 취급하는 건 위주로 PF 지속
- 물류센터의 수급 균형이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해 당분간 물류센터 PF가 급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오피스는 최근 개발사업 자금조달이 활발하나 중장기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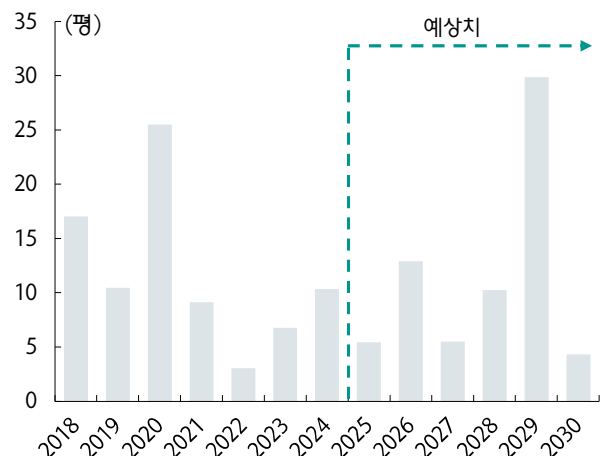
- 임대료 상승에도 신규 오피스 공급이 부족하고 기업 임차수요가 유지되면서 서울 오피스는 2% 수준의 낮은 공실률을 유지
 - 마곡, 성수 등에서 오피스 공급이 늘며 공실 증가 우려가 있었으나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등 주요 권역의 공실은 제한적
- 단, 2029년 이후 서울 도심권 오피스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장기 공실 리스크 확대에 신규 투자, PF 자금조달이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인허가 및 PF 자금 조달에 따른 준공시기 분산, 기업의 임차수요 확대 등이 변수

그림8 | 물류센터 공급면적



주 : 2024년 상반기 기준, 연면적 5,000평 이상 물류센터 대상
자료 : 물류신문

그림9 | 서울 오피스 공급면적



자료 : 알스퀘어

3. (New Economy) 빠르게 성장 중이나 아직 시장이 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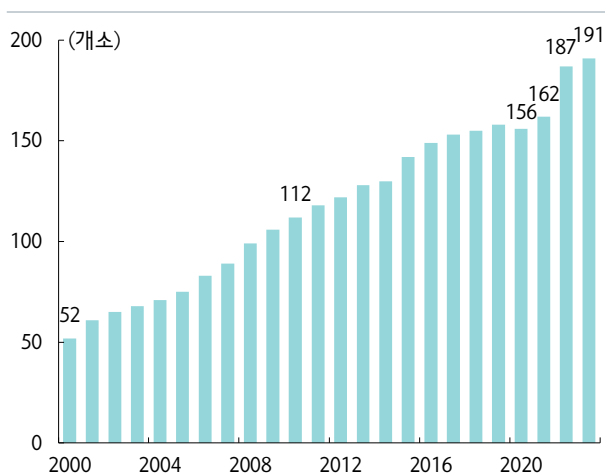
■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민원, 운영사 부족 등이 지속적 성장의 걸림돌

- 클라우드 서비스, AI 사용 확대로 데이터센터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확대 중이나 고객 접근성과 직원 대응, 통신 인프라 활용 등을 위해 수도권 입지를 선호
 - 데이터센터의 76.3%(상업용 데이터센터 78.8%)가 수도권에 위치(2022년 기준)
- 개발 가능한 용지 및 전력의 부족, 민원 증가 등은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걸림돌
- 또한 국내 데이터센터 수요자가 통신사, IT 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해외처럼 전문 운영시장(colocation)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도 시장 성장을 제약

■ (시니어시설) 인구 고령화로 각광받고 있으나 아직 프리미엄 시장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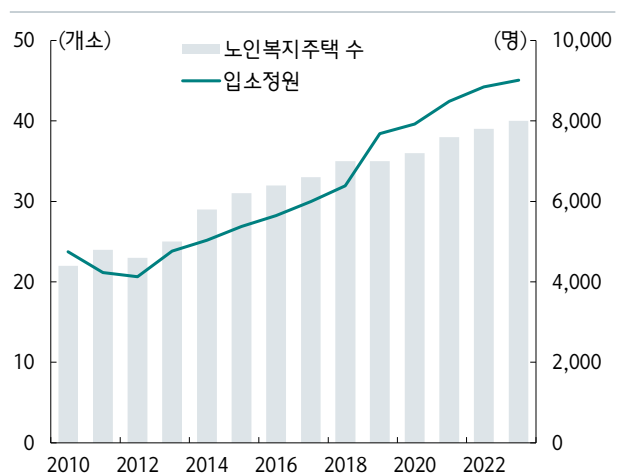
- 국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수는 고령인구 대비 0.12%로 매우 적으나 정부에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시니어 시설 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민간의 신규 투자대상으로 부상
 - 공급규제 완화, 사업자 자금조달 지원, 주택연금과의 연계 등 포괄적 지원정책을 추진
- 시설 수요자인 고령층은 도심, 대형병원에 가까운 곳을 선호하고 운영 서비스와 커뮤니티 시설도 중시해 신규 개발사업의 원가 부담이 증가
- 반면, 일반 고령자의 입소비 지불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프리미엄 시설 등으로 PF 시장이 한정

그림10 | 국내 데이터센터 수



자료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그림11 | 노인복지주택 수 및 입소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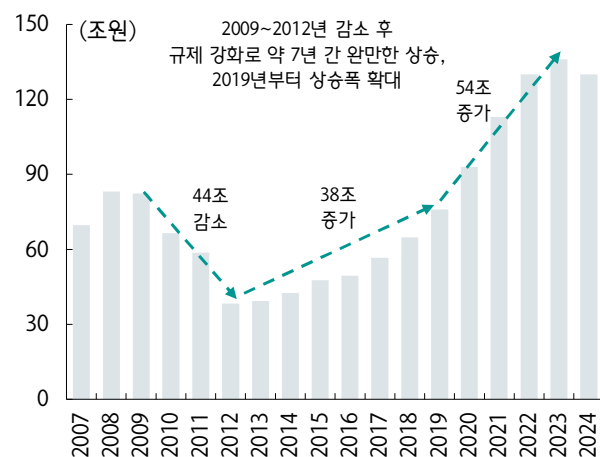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IV. 시장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 사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

- 참여기관의 재무여력 및 자산시장의 회복이 필요해 PF 시장 회복에 시간 소요
 - 최근 PF 시장 부진은 부실 사업장 증가로 인한 참여기관별 재무적 부담 확대와 자산시장의 침체가 중첩되며 나타난 결과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재편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 내 PF 시장 회복은 어려울 전망
 - 금융위기 이후에도 PF 제도 개선, 업계 구조조정, 자산시장 회복 등을 통해 PF 잔액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
 - 회복 이전까지 기존 사업장의 부실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는 한편 신규 사업은 위험도와 취급 부담이 낮은 곳 위주로 선별 취급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시장 회복도 중요하나 국내 PF 사업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
 -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의 과도한 신용보강 완화, PF 참여 금융사 다변화, 업권별 PF 취급기준 강화 등 사업모델 개선이 이루어지며 PF 시장도 확대
 - 현재 PF 위기도 高 레버리지로 인한 개발/건설/금융사의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시장이 부실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
 - 업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소건설사 및 금융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도 재구축할 필요

그림12 | PF 대출잔액 추이



주 : 2024년은 9월 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표6 | 금융위기 이후 PF 건전성 제고 관련 정책

시기	내용
2008년	- 저축은행 총당금 적립 강화
2008년	- 전 금융권 PF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2008년	- 지방 미분양 대응책 발표 (LTV 상향(10%p), 취득세 50% 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인정기간 연장 등)
2008년	- 전 금융권 PF 사업장 자율 워크아웃협약 제정 및 시행
2008 ~ 2009년	-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매입
2011년	- PF 정상화 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 - 리츠 펀드 세제 지원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 토지이용 규제 완화로 공급여건 개선 - SOC 민자사업 활성화

자료 :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11.5.2.,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PF 2차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재구조화 현황”(’24.12.1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24.12.1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10.3.2.,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24.11.14.,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 개최”(’24.12.19.,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05.14.,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25.02.27., 보도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시장동향’
 한국신용평가(2024), “건설: 기지개 켜는 주택시장, 건설사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물류신문, “물류부동산 현황과 물류기업의 부동산 전략”(’24.11.5.)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부동산114, <https://www.r114.com>
 알스퀘어, <https://www.rsquare.co.kr>
 코어비트, <https://www.corebeat.co.kr>
 통계청, <https://kostat.go.kr>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https://kdcc.or.kr>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
 KB부동산, <https://kbland.kr>

하나Knowledge⁺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

